

KCC-현대, 법정다툼 앞서 극한대립

현대 이사진 상대 “직무유기 가처분” 추가 ... 김문희 여사는 상속 대응

금강고려화학(KCC)과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 측이 본격적인 법정다툼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함께 상대측의 논리를 정면 반박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최대 승부수가 될 수 있는 법원결정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의 관건은 상법 424조의 <유지(留止) 청구권> 조항에 근거해 현정은 회장의 유상증자 결정이 관련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지와 유상증자로 KCC가 주주로서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이다.

KCC 관계자는 “유상증자 방침은 사실상 지배구조 획득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에 국한돼 있는 증권거래법과 정관상의 증자요건을 벗어나는 만큼 관계법령상 위법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증자는 주식가치 희석에 따른 주가하락 가속화를 초래해 명백히 주주 이익을 침해하게 되며, 특히 인수주식수 제한(300주)을 통해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하는 등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현정은 회장은 증자가 법령과 정관상의 증자요건인 경영상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정은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술개발과 사업확대를 위한 장기투자를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으며 증자는 이를 위한 투자자금 마련 목적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경영권 방어 차원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각각 자문변호사를 통해 대응논리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현정은 회장은 정상영 명예회장이 경영권 분쟁의 상대로 김문희 여사를 지목하며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당장 현정은 회장에게 넘겨야 대화가 가능하다”며 공격한 데 대해 11월24일 김문희 여사가 이미 현정은 회장 등 유족에게 지정상속 의사를 서약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 절차까지 완료했다고 응수했다.

현대 측이 공개한 확인서에 따르면, 김문희 여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전체(18.93%)를 현정은 회장 등 고 정몽헌 회장의 유족에게 지정상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도 유족에게 대상 주식을 직접 증여하겠다고 서약했다.

KCC는 지난주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이 과다한 유상증자로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번 주 안으로 이사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 제출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KCC는 현정은 회장이 김문희 여사의 지정상속 확인서를 공개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현대 관련기업에 총 3472억원을 출자해 11월21일 종가 기준으로 총 1289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다”며 현대 관련사 투자가 최대주주의 개인 이해에 따른 것이라는 세간의 비난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Chemical Journal 2003/11/25>